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 설문 결과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목 차

1. 들어가며	(1쪽)
2. 인권활동가들이 꼽은 인권의 장면	(2쪽)
1)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2쪽)
(1) 인권장면 및 설문참가자 응답	(2쪽)
(2) 소결	(9쪽)
2)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11쪽)
(1) 인권장면 및 설문참가자 응답	(11쪽)
(2) 소결	(20쪽)
3)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	(21쪽)
(1) 인권장면 및 설문참가자 응답	(21쪽)
(2) 소결	(31쪽)
3. 함께 기억해야 할 인권의 장면	(33쪽)
4. 나가며	(39쪽)

1. 들어가며

2017년 7월 인권운동더하기는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을 발표했다. 인권과제는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4가지의 방향 아래 총 81개 항목을 담았다. 정권 초기에 인권운동의 이름으로 수많은 인권과제를 모아냈던 이유는 촛불 정권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시키기 위함이었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목소리를 정권교체로 수렴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요구를 인권과제라는 이름으로 담아낸 것이다.

그로부터 4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다시 대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제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또는 제자리거나 후퇴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면 새로운 과제가 도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저 제도가 조금 변화했다는 이유로, 나아진 점이 있다는 이유로 인권의 현실이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시 대선을 앞둔 지금 새로운 과제를 제안하는 것보다 제도의 전진과 후퇴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부터 먼저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 설문조사는 그렇게 기획되었다. 특히, 81개 인권과제는 인권활동가들이 마주하는 현장을 바꿔내기 위한 제안이었던 만큼 정부의 과제만이 아니라 인권운동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제출된 인권과제들의 현재를 살피고, 제안될 당시와는 달라진 현재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설문 구성은 기존의 인권과제 방향에 맞춰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어 같은 질문을 배치했다.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로 설문 항목을 나누고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는 앞선 분류와 같은 위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지 않았다. 설문에서는 각 분류에 따라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장면을 나열하고 인권활동가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장면 3가지를 선택한 뒤 이유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처럼 인권과제를 모아내거나 인권 관련 정책의 성적을 도출해내기보다 인권 현실을 마주하기 위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2021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된 설문에는 총 119명/76개 단체의 인권활동가가 인권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주목했던 사건/장면은 무엇이었는지 응답해주었다. 짧은 기간에도 인권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주목해야 하는 사건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하는 현실은 어떤지 꼼꼼하게 정리해낼 수 있었다. 물론, 설문의 결과만으로 인권운동의 과제가 도출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 최전선에서 고민하고 움직이는 활동가들의 응답이 인권운동이 마주하고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해내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2. 인권활동가들이 꼽은 인권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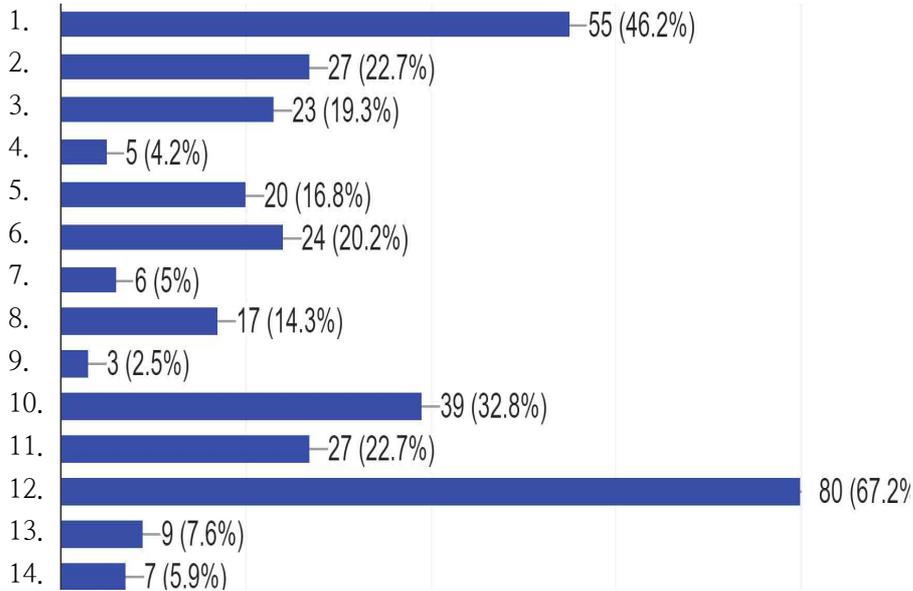
1)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 인권장면 및 설문참가자 응답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 핑계로 금지된 집회의 자유>(67.2%)와 <70년 넘긴 국가보안법, 국회는 모르쇠>(46.2%), <‘케이(K)-방역’이 불러 온 ‘케이(K)-감시’>(32.8%) 항목을 문재인 정부의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으로 꼽았다. 또한 인권활동가들은 <검찰 개혁 3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했지만...>(22.7%) 항목과 <코로나19와 엄벌주의 확대>(22.7%), <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및 재판 거래 등 세상에 드러난 ‘사법농단사태’>(20.2%), <국가가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넘기다>(19.3%), <말잔치에 그친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16.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그러나...>(14.3%) 항목도 주목할 만한 인권의 장면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인권활동가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와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 확산>(7.6%), <혁신위 권고 이행 미흡한 국가인권위>(5.9%), <보호감호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 시도>(5.0%),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프락치’ 수사 등 민간인 사찰문제>(4.2%),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2.5%) 등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확인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장면으로 꼽았다.

(그래프는 다음 쪽에)

〈그래프1.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 70년 넘긴 국가보안법, 국회는 모르쇠
2. 검찰개혁 3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했지만...
3. 국가가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넘기다
4.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프락치 수사' 등 민간인 사찰문제
5. 말잔치에 그친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
6.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및 재판거래 등 세상에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
7. 보호감호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 시도
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그러나...
9.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10. 'K-방역'이 불러온 'K-감시'
11. 코로나19와 엄벌주의 확대
12. 코로나19 핑계로 금지된 집회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보호와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 확산
14. 혁신위 권고 이행 미흡한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핑계로 금지된 집회의 자유〉 (67.2%)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도심에서 집회가 금지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회가 무기한 전면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으며 참가 인원이 제한되기도 했다. 대규모 집회를 감행했다는 이유로 2021년 9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집회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시기 삶의 위기를 겪는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인권활동가들은 “(대규모 집회인)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정부가 집회를 금지했다”, “정권이 시민의 공포심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존할 수 있음에도 토론과 협의 없이 일방적 통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집회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제한·금지하는 것은 집회를 범죄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든다.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는 가장 최후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다른 영역의 방역 조치에 비해 유독 집회만 고강도로 제한하고 있는 점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방역 당국은 안전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70년 넘긴 국가보안법, 국회는 모르쇠〉 (46.2%)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70년을 넘겼지만 건재하다. 통일부에 북한접촉 신고서를 제출하고 남북경협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가가 2018년 구속되었고, 2021년에는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낸 출판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1년 5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만 9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대행진, 국회 앞 1인 시위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국가보안법 전체를 폐지하는 강은미 의원안과 민형배 의원안,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제7조를 폐지하는 이규민 의원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논의되지 않고 있다. 2021년 11월 9일 법사위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논의를 무기한으로 미뤘다.

설문조사에서 인권활동가들은 “악법 중에 악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국가보안법도 폐지 못하는 민주당 대통령이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가 무엇을 배제하는지 보여 준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K-방역’이 불러 온 ‘K-감시’〉 (32.8%)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케이(K)-방역’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감염 의심자에 대한 감시·추적·식별을 이유로 CCTV와 위치추적, 디지털로 집적된 신용카드·교통카드 정보, 전자출입명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에 기반을 둔 휴대전화 실명제 등을 활용했다. 한때 확진자

통신·개인정보 공개로 신상털기가 만연했고, 이태원 접촉자 추적을 명분으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 정보가 수집되기도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일상 곳곳에서 항시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받음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홈리스, 집회 참가자, 백신 미접종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이어졌다. 인권활동가들은 “방역을 이유로 너무 많은 권리들이 유예당하는 것”, “감염병을 범죄화하는 데 국가가 역할을 하고 있다”, “방역을 이유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자유에 대한 침해를 불가피한 일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전반적으로 인권감수성의 후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권활동가들은 “‘케이(K)-방역’이 만들어낸 새로운 감시 체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방역을 위해 기본권 제한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줬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찰개혁 3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했지만...〉 (22.7%)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대 주요 범죄에 한하여 남아있고, 검찰청 직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되고 있는 한편 검찰의 기소권은 큰 변화가 없으며, 공수처 공소심의위 운영에 관한 지침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시민사회에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관하여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향후 해고자의 복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인권단체를 통해 제기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인권활동가들은 수사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수사 영역에 대한 시민의 개입 등 민주적 통제 수단을 강화하기보다는 “권력기구 사이의 권한 나눠먹기”와 “또 다른 권력기구 창설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을 표방했지만 “개혁을 이끌어가는 주체에서 시민은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검찰이 언론 및 정치권과 연결하여 정치적 판도를 뒤흔들고 있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코로나19와 엄벌주의 확대〉 (22.7%)

인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이 개인의 잘못된 것처럼 감시하고 엄벌하는 법제도와 정부의 태도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격리조치·집합금지 등 강제 조치의 행사 주체와 대상, 제재 범위가 확대되었고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가족의 임종이나 치료, 생필품 구매, 출근 지시나 범죄 피해 신고를 위한 이탈 등 부득이한 경우, 치매 증상과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처벌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사회적 위기 또는 위험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권력이 과도하게 커졌고 그 권력이 인권을 유예하고 있는 점, 엄벌주의 일변도의 대응이 사회에서 수용되면서 시민 사이의 대립과 적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코로나19 위기에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실종되었다는 점, 정부가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에게 자행되는 혐오와 공격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가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처벌로써 질병을 통제하려고 하여 질병을 죄로 인식하게 만들고, 질병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낙인찍는 데 앞장섰다”, “위기 예방을 위한 엄벌주의와 집회시위 자유 제한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중의 위기와 위기에서의 고립으로 귀결되었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및 재판 거래 등 세상에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 (20.2%)

사법부 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018. 5. 25.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권 시기 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및 재판 거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전사회적으로 드러났다. 긴급조치 배상판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사건, 일본군 ‘위안부’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등이 포함되어있어 시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존립 목적과 독립성이 크게 침해되었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6명과 비위법관 66명이 기소되었으나 문재인 정권 말기로 접어든 현재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자체 징계도 없고 피해자 구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활동가들은 “체대로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권력 유지를 위해 부당하게 사회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 용인되는 전례를 남겼다”, “인권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사법부가 권력과 결탁했음이 드러났는데도 바로잡히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인권활동가의 지적처럼 “인권제도의 무효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넘기다> (19.3%)

2020년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가명 처리된 고객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개인정보 3법’을 의결·시행했다. 최근에는 2019년부터 법무부가 사기업에게 1억 건이 넘는 내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성별,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을 이유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인공지능 학습·검증용 데이터로 이용한 것이다.

그 외에도 과기부가 주도하는 여러 디지털 뉴딜 사업이 국가가 보유한 내외국인 민감정보를 사기업에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이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사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사유화하고 시민 감시의 효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감시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말잔치에 그친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 (16.8%)

2017년 경찰청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제주해군기지, 쌍용차 파업,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 등 10개 사건에 대해 조사 후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당시 경찰청장이 사과했다. 그러나 기업의 노동권 말살과 주민의 동의 없는 정부의 국책 사업 강행, 이를 뒷받침한 정치 경찰의 존재야말로 인권침해라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개별 사건에서 경찰권 행사의 위법성이나 과도함을 지적하는 데 그쳐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책임자는 대부분 처벌되지 않았고 현직에 남아있다.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은 물대포·차벽의 원칙적 사용 금지, 채증 요건 강화 등 몇몇 관행의 개선과 내부 규칙의 개정에 그치고, 쌍용차 파업의 경우 가압류는 해제되었으나 손해 소송은 유지되는 등 말잔치에 그쳤다. 결국 사드와 관련하여 성주에서는 경찰폭력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집회에서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인권활동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 현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용두사미”, “이명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지만 경찰 인권침해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해결책을 세우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그러나...> (14.3%)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1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됐다. 인권운동의 노력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것은 큰 진전이지만 현역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체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긴 36개월(육군 현역군복무의 두 배)이어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거둬들인 시정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대체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제한하면서 대체복무 도입의 효과가 반감되었다. 한편 대체복무 도입 이후에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병역거부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진정한 양심’ 여부를 추궁당하며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대체복무제 하에서도 양심에 대한 심사는 계속되고 있다”, “병역거부가 ‘권리’의 차원으로 인정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보호와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 확산> (7.6%)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보호와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가짜뉴스’로부터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와 달리, 개정안에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각계 입장도 있었다.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촉발된 논쟁은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했고, 언론이 당면한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

설문에 응답한 인권활동가들은 “의도가 너무나도 뻔뻔하고 뻔히 보인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로서의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할 뿐,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국가의 역할을 형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반해 “언론이 저널리즘에 입각한 진정성 있는 보도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각계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혁신위 권고 이행 미흡한 국가인권위> (5.9%)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는 △조직의 관료화 극복을 위해 직원 채용시 민간 출신 입직 경로 확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추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시민사회 참여 강화 △포괄적인 비공개 회의 관행 개선 등 투명성 제고를 권고했다. 이후 최영애·송두환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전 후보추천위원회가 운영되기는 했으나 이를 필수절차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알권리 보장과 인권위 논의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회의록 공개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는 등 혁신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문재인 정권이 인권증진이라는 입장표명은 했으나 실질적인 인권증진과 성찰에는 한참이나 미흡했고 그 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인권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 말잔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보호감호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 시도> (5.0%)

2020년 당정은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범죄를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처벌하자는 것이다. 재범 가능성 판단은 범죄 가능성 판단과 다르지 않은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측정 방법도 없다. 한편 이와 유사한 보호감호제는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5년 폐지되었으나, 폐지 법률 부칙에 따라 법 폐지 이전에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현재도 구금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인권활동가들은 “오래전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으로 사라진 보호감호제도를 이름만 바꾸어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는 오직 강성형벌만을 추구하는 법무부의 논리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하는 것”, “국가가 통제와 감시, 처벌을 중심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개별(범죄) 사건을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하며 차별과 혐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프락치’ 수사 등 민간인 사찰문제> (4.2%)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 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

안’이 통과되었으며, 2024년부터 경찰 안보국이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예정이다. 해당 개정법을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한은 갖지 못하지만 ‘조사권’이 신설되어 사실상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2019년 이른바 ‘프락치’ 폭로로 문재인 정권 아래서도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점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었다.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정원은 정보를 특정하라고 요구하거나 일부 정보만 공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사회적 압력으로 국정원 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국정원이 (수사권과 비슷한) 조사권을 갖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라고 평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2.5%)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해산 이후로 10년이 지난 2020년 12월 제2기 진화위가 출범했다. 10년의 시간 동안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이 드러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2기 진화위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졌다. 제1기 진화위에 비해 많은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진실규명 작업에 시급을 다투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 위원의 수가 15인에서 9인으로 축소되었고, 과거사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조사기간도 최대 6년에서 최대 4년으로 축소됐다.

(2) 소결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촛불은 단지 박근혜의 탄핵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과거 정권에서 자행한 국가폭력 사건의 처벌과 피해의 회복, 국정원·검찰·경찰·국가인권위에 대한 철저한 개혁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사회,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은 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용산참사, 제주해군기지, 쌍용차 파업,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 등 경찰 인권침해 사건의 책임자는 대부분 처벌되지 않았고 현직에 남아 있다. 경찰청장이 사과했고 몇몇 관행이 개선되었지만, 국가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와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연이은 무죄 판결과 함께 향후 국가폭력 사건의 재발을 예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권력기구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공언했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권력 기구 사이의 권한 나눠먹기와 또 다른 권력 기구 창설에 그쳤다.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의 개입 등 민주적 통제 수단 강화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70년을 넘겨 문재인 정부에서도 폐지되지 못한 채 건재하다. 10만 명을 넘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지금까지 계류되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법사위는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등의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2024년으로 연장 결정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지가 사실상 없음을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으나, 병역거부자는 여전히 '진정한 양심' 여부를 추궁당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3법' 의결·시행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 입법으로 부정당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맨얼굴을 드러냈다. 감시·추적·식별을 목표로 한 '케이(K)-방역'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며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홈리스, 집회 참가자, 백신 미접종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이어졌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며 코로나19 시기 삶의 위기를 겪는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할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엄벌과 '무관용 원칙' 적용은 코로나19 확산을 개인의 잘못으로 간주하게 하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립과 적대를 형성하게 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실종되었고, 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는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권력기구 개혁이라는 과제만큼은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출범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미진한 개혁과 권력기구의 건재를 지켜보며 스스로 공언했던 개혁 과제조차 이뤄내지 못한 정부로 기억한다. 해묵은 과제인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정부로 기억한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집회의 자유까지 금지하면서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접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쳤지만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2)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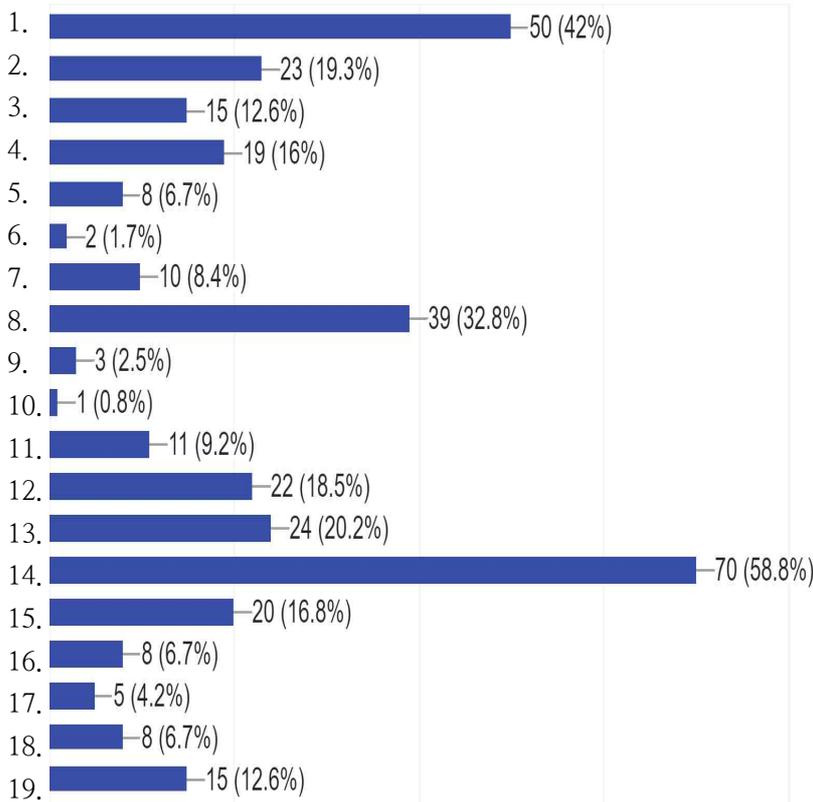
(1) 인권장면 및 설문참가자 응답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권활동가들은 “더 많은 평등”과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장면으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58.8%), <고 변희수 하사의 싸움>(42%), <성별대립구도로 가려지는 페미니즘 백래시>(32.8%)를 꼽았다. 이어 차별의 민낯이 드러나고 페미니즘의 진전과 후퇴가 교차하는 시간 위에 있었던 <예멘난민입국과 '가짜난민' 논란>(20.2%), <낙태죄 폐지>(19.3%),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18.5%)을 비롯해 <코로나19와 차별>(16.8%), <미투운동의 흐름>(16%), <다양한 가족구성권 확장, 성소수자는 배제>(12.6%), <혐오세력과 인권조례 폐지>(12.6%) 또한 중요하게 짚어졌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확장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사태>(9.2%), <선거연령하향과 청소년 참정권>(8.4%)이 꼽히고,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듯한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6.7%), <텔레그램n번방과 신상공개 요구>(6.7%)를 비롯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춤 속, 학생인권법 발의>(6.7%), <폐지되지 않은 균형법 92조의 6>(4.2%), <양천아동학대사건 이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5%), <불편한용기 시위와 여성 대중의 결집>(1.7%), <엘리트 체육계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0.8%)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그래프는 다음 쪽에)

〈그래프2.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1. 고 변희수 하사의 싸움
2. 낙태죄 폐지
3. 다양한 가족구성권 확장, 성소수자는 배제
4. 미투 운동의 흐름
5.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6. 불편한용기 시위와 여성 대중의 결집
7. 선거연령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8. 성별대립구도로 가려지는 페미니즘 백래시
9. 양천아동학대사건 이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10. 엘리트 체육계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
1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사태
12.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
13. 예멘난민입국과 ‘가짜 난민’ 논란
14.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
15. 코로나19와 차별
16. 텔레그램N번방과 신상공개 요구
17. 폐지되지 않은 균형법92조의6
18.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춤 속, 학생인권법 발의
19. 혐오세력과 인권조례 폐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 (58.8%)

2021년 6월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고, 장혜영·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국회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평등길1110이 국회 앞에 다다른 날, 국회는 21대 국회 회기 종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연장한다며 청원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국회 앞에는 14년간 유예된 평등의 시간을 더는 유예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이 진행 중이다.

인권활동가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여전히 미뤄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짚었다. 14년 유예되어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아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하면서, “임기 말이 되어야 ‘때가 됐다’는 등 말만 엮고 마는 “정권의 비겁함”, “21대 국회 회기 종료까지로 심사 연장한 것은 아예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로만 계산하고 미루는” “민주당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고 있지만, “평등의 가치를 확대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계속 만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맞서는 메시지를 운동이 만들어” 왔고, “자기 자리를 못잡고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각자의 오롯한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희수 하사의 싸움〉 (42%)

2020년 1월, 변희수 하사가 군의 강제전역 결정에 맞서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미뤄지던 중 2021년 3월 변희수 하사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고 연이어 트랜스젠더의 죽음이 알려졌다. 2021년 10월 법원은 변희수 하사의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고 변희수 하사와 트랜스젠더 동료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배제되지 않는 삶, 살아가는 그대로 존중받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한국사회 가장 비민주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군대라는 곳에서 일상화된 혐오와 차별을 드러낸 사건이자, 한 사람의 용기와 희생, 이에 더해 평등을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끌어낸 판결”로 변희수 하사의 싸움을 기억했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존엄을 말살한 국가권력의 폭력”이자 “혐오와 차별에 의한 사회적 죽음”으로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말고 싸워나가야 할” 몫을 같이 짚었다. 추모와 다짐의 시간을 이어온 인권활동가들은 변희수 하사와 트랜스젠더 동료들을 기억하며 “존재를 드러내며 낸 용기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내고 변화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성별대립구도로 가려지는 페미니즘 백래시〉 (32.8%)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 이후 보수 세력에 표를 던지는 20대 남성의 정치 성향을 하나의 현상으로 주목함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반페미니즘이 부상하였다. 이 흐름 속에서 반페미니즘과 여가부 폐지를 내건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의 대권 주자 이재명도 여가부

개편을 이야기하며 같은 논리에 편승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백래시를 소위 젠더갈등으로 다루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문제를 쉽게 가리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가장 활발히 벌어진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이 사회가 얼마나 강고하게 버티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이러한 저항이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암담한 현실”이 페미니즘 백래시로 드러난다고 짚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정부에서 페미니즘을 미사여구로 활용하며 지금의 젠더갈등 구도를 형성하는데 일조”했고, “미투운동이 열어 놓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로 드러난 폭발적인 대중적 요구와 용기를 성별갈등구도로 소비하고 소모되도록 방치하고 성평등 정치/의제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페미니즘 백래시에 앞다퉈 편승하며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성별대립구도를 조장하고 재생산하면서 착취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리는” 흐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정치는 사라지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정치”에 맞서 “옳은 방향으로 싸움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금 운동이 함께 밀어붙여야 할 과제라고 짚기도 했다.

<예멘난민입국과 '가짜난민' 논란> (20.2%)

2018년 5월 내전을 피해 제주로 입국한 예멘 난민에 대해 ‘불법취업이 목적이고’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난민’이라며 차별과 혐오의 움직임들이 이어졌다. 이에 맞서 평등과 연대로 난민과 함께 나아가자는 난민환영집회가 10월 20일 열렸다. 한편 8월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한 아시아 최초 국가라 내세우지만, 한국의 난민 제도와 난민 인권 현실의 거리는 멀기만 하다. 해마다 난민 인정률은 줄어드는 상황으로, 2018년 12월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단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2020년 12월 법무부는 난민 심사의 벽을 더욱 높이는 난민법 개악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해 난민인권단체는 ‘이제는 K-추방인가’라며 비판하였다.

인권활동가들은 “난민 문제를 한국에서 본격화”한 사건으로 예멘난민 사건을 떠올리며, 국가가 나서 “자격심사의 프레임 속에서 존엄을 부정하고 편견에 부응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난민의 존재가 가시화되었지만 “한국사회는 시민과 비시민을 경계짓고 비시민을 비가시화하며 사회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난민협약가입국으로 국제적 난민 보호의 책무가 국가에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치”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낙태죄 폐지> (19.3%)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며 통제하던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 처벌도 허락도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끝에, 7년 만에 헌재의 판결이 뒤집히고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2020년 9월 정부는 임신 기간에 따라 허용 범위를 통제하는 입법을 예고했지만,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낙태죄 완전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막아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 문제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인 낙태죄 폐지에 이르기까지 “현재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제도정치가 아닌 운동”이었음을 짚었다. 또 강남역 사건부터 미투운동, n번방에 이르기까지 쉴 틈 없던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낙태죄 폐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면서, “판결 이후에도 주수 제한이나 사유 제한 등을 담은 입법예고”를 한 정부,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부합하는 “대체입법을 하지 않고 입법 공백”으로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과 의지 없음을 비판했다.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 (18.5%)

안희정(2018년 3월), 오거돈(2020년 4월), 박원순(2020년 7월) 등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잇따라 폭로되었다. 권력형 미투의 과정은 위력을 강제적인 물리력이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경우로만 좁게 해석되던 관행을 깨뜨리고,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드러나고 있음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안희정, 박원순을 지지하는 세력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공격의 과정은 성폭력 폭로 이후에도 여전히 위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인권활동가들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다양한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과 자신이 겪은 일을 증명해내어야 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여전”하지만 피해자의 용기와 이를 지지하는 흐름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의 문제, 권력의 차이에서 생기는 위력으로 인한 폭력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쌓아오고 있다는 것을 짚었다.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성추문에 대하여도 침묵으로 수수방관” 해온 집권 여당에 대해 “보수야당과 다른 촛불정권이라고 하지만 기득권 입장에서 별반 다르지 않”으며 “차별과 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게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권력형 성폭력이 계속 된다는 건 우리 사회 젠더 감수성과 차별의 바로미터”라고 답했다.

〈코로나19와 차별〉 (16.8%)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동시에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던 한국 사회는 이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감염의 책임을 묻고자 신천지나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한 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을 지목해왔다. 방역의 책임을 소수자에게 전가하며 차별적인 인식을 강화시켜온 정부와 지자체는 2021년 3월에도 이주민 강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코로나19는 차별적인 사회에서 재난이 누구의 권리부터 유보시키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인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가 “무권리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가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짚으면서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는 시민과 비시민의 경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배제되고 소외되는 이들의 인권 후퇴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드러난 술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정부는 K-방역의 성과 홍보로 바꿔치기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하였다.

〈미투운동의 흐름〉 (16%)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범조계 미투로 미투운동이 촉발되었다. 00계 미투에서 스쿨미투까지 장소와 시간을 넘나들며 이어진 미투운동의 흐름은 성폭력이 구체적인 권력관계에서 비롯하는 일상의 폭력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러한 미투운동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사회를 바꿔내는 운동으로 나아갔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투를 제기한 여성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걸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변화의 목소리를 왜곡시키는 흐름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미투운동을 “여성의 말하기이자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대중의 움직임”으로 보면서, “성폭력 사건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은 사회의 변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원순 사망 이후 ‘가짜 미투’ 등 백래시가 등장”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모친 장례 조문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레) 강행 등 여성 대중의 목소리를 묵살”하면서 “페미니스트, 성평등 등을 표방했지만 평등을 위한 변화를 만들기는커녕 스스로 평등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었던 민주당의 저열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 확장, 성소수자는 배제〉 (12.6%)

2021년 4월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가족 정책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 가족다양성과 돌봄을 키워드로 작성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진전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인정한다는 진전 속에서도 동성결혼의 관계는 배제되었다. 2020년 10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 혼인관계의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평등의 가치가 어디에서 멈춰 서있는지가 확인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확장은 기존의 가부장체제가 가족 구성단위의 기본이어야 한다는 구습을 깬다는 점과 더불어 여전히도 소수자 배제에 찌든 사회 현실을 반영한 장면”이라 이야기했다. “평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은 시기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혐오세력과 인권조례 폐지〉 (12.6%)

2018년 2월 충남 인권조례 폐지, 2019년 3월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도입 중단, 2019년 6월 부천시의회 문화다양성 조례 폐지 등. 인권, 성평등, 다양성 등이 들어간 온갖 조례를 혐오선동세력은 무너뜨렸다.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난무하는 폭력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후 지역에 따라 인권 조례가 다시 도입되기도 했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항이나 문구를 삭제하면서 혐오선동의 효능감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인권조례의 폐지 시도는 대표적인 인권의 후퇴를 보여준 장면”으로 떠올리며 인권활동가들은 “촛불 이후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함께 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대표적 증거가 혐오와 차별의 방조”라고 짚었다. 그리고 “잇따른 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혐오세력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실은 가치 중심 정책이 아닌 대중 영합적인 정책에 다름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사태〉 (9.2%)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이후 민주당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창당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양당 구도를 더욱 고착시키고 정치개혁의 의미를 후퇴시켰다. 이로 인해 기존의 양당 구도를 깨뜨리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체도로 거듭나야 한다던 정치개혁의 목소리도 줄어든 상황이다.

인권활동가들은 이에 대해 “정당정치의 기본적 신뢰가 무너진”, “소수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위헌적 위성정당” 시도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민주당까지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부 역시 국민의힘과 결탁하는 세력임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짚으며,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은 고착된 정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지난한 싸움임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선거연령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8.4%)

2017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오랜 시간 참정권 확장을 위해 요구해온 선거 연령 확대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초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만들어지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2019년 12월 선거 가능 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선거운동 참여나 정당 가입은 금지하는 여전하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19세에서 18세로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담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이끌기까지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던 것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도약”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연령을 기준으로 “허용해주는 식의 선을 넘어”야 하고 “투표권이 핵심이 아니라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의 방향으로 더욱 나아가야 하며 “공론장에 참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짚었다.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6.7%)

2021년 5월 공군 중사가 성폭력 2차 피해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고, 곧이어 해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두 사건 외에도 이미 수년째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었다. 2021년 9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등 일부 범죄는 수사과 기소, 재판까지 민간법원으로 옮기고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여성에게 차별적인 군대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는 정부도 군대도 제대로 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여전히 “암담한 군대 현실”이지만, “미투운동의 힘이 군대까지 퍼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힘에 “강력히 저항하는 군대와 정부의 현재” 상황에 “여성에게 차별적인 군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텔레그램n번방과 신상공개 요구〉 (6.7%)

2020년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성착취 성범죄가 드러나며 대화방 참여자 26만명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일었다. 이는 ‘소라넷’부터 반복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는 요구였다. 국회 첫 국민동의청원으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처벌법 등 개정이 2020년 4월 이루어졌지만, 규제와 처벌 강화로만 그쳤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넘어 생산-유통-소비-확산의 연쇄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와 일상성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성착취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차별의 구조”라는 문제를 직시하며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목소리 내며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정권은 여성주의적, 페미니즘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처럼 표방했지만, n번방 같은 사태가 지속되는 현실은 그것이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뿐임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짚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춤 속, 학생인권법 발의〉 (6.7%)

2021년 11월 3일 학생의 날,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201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청소년 인권, 차별 금지,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혐오선동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제정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모든 지역, 모든 공간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역의 격차가 없도록 청소년인권운동의 목소리를 모아내며 학생인권법이 15년 만에 다시 발의된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며,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지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발의되었던 법안인데 15여 년이 지나 다시 발의된 상황”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생활 속에 자리잡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 무관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폐지되지 않은 균형법 92조의 6〉 (4.2%)

2017년 4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육군 중앙수사단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논란 제기됐다. 동성애자 처벌법으로 오랫동안 폐지가 요구되어온 균형법 92조의6을 근거로 군의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육군은 ‘엄정한 군기 유지를 위한 군 기강 문란행위 처벌’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동성애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균형법 92조의6 추행죄 적용으로 A대위 1,2심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2020년 균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다시 신청된 상태다.

인권활동가들은 오랜 기간 과제로 제기되었던 균형법 92조 6 폐지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 처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정부여당이 나서서 평등권을 침해하며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양천아동학대사건 이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2.5%)

2020년 12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라고 불린 양천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었다. '입양'이 문제인 것처럼 다루어지면서 아동학대를 특정 가족형태의 문제로 왜곡한다는 비판과 함께, 아동이 아닌 가해 부모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건이 다루어지는 문제, 아동의 권리 보장보다는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대책의 방향이 가진 한계가 지적되었다. 2021년 1월 민법 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 삭제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이 이루어졌다. 신고만으로도 즉시 분리조치가 가능해지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사건 발생 이후 대처할 수 있는 구조는 갖추지 않은 채 처벌만 강화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활동가들은 양천아동학대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로 “아동인권이 공론화되고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가족을 통해 유지되는 폭력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사회가 아동의 권리와 양육에 얼마나 무책임한지도 보여준 사건”이라고 답변하였다.

〈불편한용기 시위와 여성 대중의 결집〉 (1.7%)

2018년 5월 시작된 '불법촬영 판파수사 규탄'하는 시위가 6차까지 진행되었다.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불법 촬영을 몰카, 음란물로 치부하던 사회를 규탄하며 여성 대중의 대규모 결집으로 이어졌다. “야한 동영상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물”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며 웹하드 카르텔을 문제로 지목하였다. 이후 버닝썬 게이트, 텔레그램 n번방, 웰컴투 비디오 사건 등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내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

이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분노가 집단적으로 표출되었”고 제도적 변화를 이끌기도 했지만, 또다른 n번방은 계속되고 여전히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는 그대로인 현실에서 더욱 진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엘리트 체육계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 (0.8%)

2019년 1월 심석희 선수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등 이른바 엘리트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체육계의 권력관계와 폐쇄성이 성/폭력의 문제로 드러나면서 체육계만의 특수성으로 치부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냈다. 한편, 국가인권위에서 꾸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미뤄온 것이 드러나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 처벌에 그치며 “다른 성폭력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해결 방식”이라 돌아보면서 특별조사도 진행했지만,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확인하기는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2) 소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 5년, 평등은 더욱 멀어졌다. ‘사회적 합의’와 ‘나중예’를 말하며 정부와 여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을 지워왔다. 14년 유예된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미룬 정치는 차별과 혐오의 움직임에 평등을 세워가야 할 자리를 내주었다. 트랜스젠더, 난민의 존재가 가시화된 사건들은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원칙을 세우고 만들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국가는 언제나 방관하거나 오히려 정체성 간 갈등으로 왜곡하고 부추겨왔다. 평등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책무 앞에서 한없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했던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지금도 인권활동가들은 더 이상 평등이 유예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차별 없는 군대라는, 변희수 하사가 바란 내일을 우리의 오늘로 만들기 위한 걸음도 쉽 없이 내딛어왔다.

문재인 정부 5년은 미투운동부터 디지털성범죄까지 일상에서 여성이 겪는 폭력과 차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시간이었다. 여성들의 끊임없는 말하기, 결집과 투쟁은 사소하게 여겨져온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해온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을 가로막는 백래시 현상과 함께 반페미니즘이 부상하고 있다. 정치적 계산 속에서 정치권은 성별대립구도를 만들고 이를 ‘젠더갈등’이라 왜곡하면서 성평등의 시계를 뒤로 돌리고 있다. 탁현민 경질 요구를 외면하고, 안희정, 박원순 등 이어진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침묵하거나 2차 가해를 하면서 성찰과 반성,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정부와 여당은 우리 사회에서 평등의 자리를 넓혀온 페미니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평등의 요구를 뒤로 돌려온 정치권은 민주주의의 진전 또한 가로막아왔다.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여야 할 것 없던 위성정당 꿈수로 사라졌다. 남성권력중심의,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양당구도 속에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청소년 참정권 투쟁은 선거 가능 연령 하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투표를 넘어 ‘미래세대’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인 청소년의 권리 보장의 디딤돌을 만들어가는 걸음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계기였다.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에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기대하고 말할 수 없음을 확인해온 시간이다. 이에 맞서 존재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당사자들과 운동으로 지켜온 평등과 민주주의의 자리를 확장해갈 과제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3)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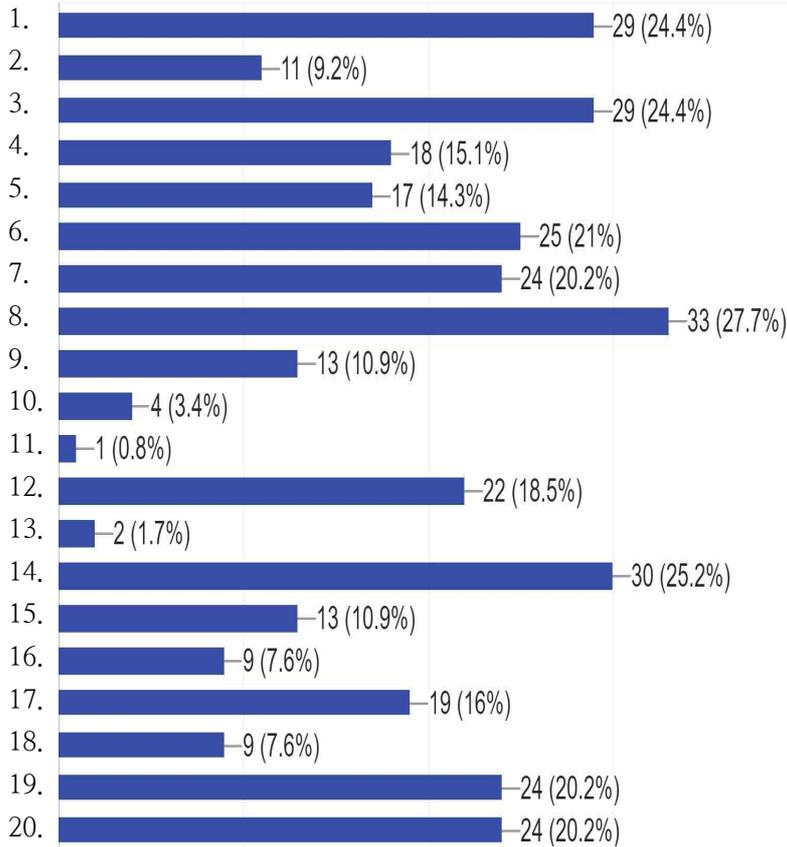
(1) 인권장면 및 설문참가자 응답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권활동가들은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와 관련해서는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와 대형노동재해>(27.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노동안전 관련법 개정>(25%),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합헌 결정>(24.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24.4%) 항목을 문재인 정부의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으로 꼽았다. 다만 이 영역에서는 인권활동가들이 꼽은 주요 장면이 특정 몇 사안으로 집중해 드러나지는 않았다. <멈춰진 시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21%), <목숨을 앗아간 것은 코로나19가 아닌 폐쇄된 시설>(20.2%),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20.2%), <현장실습생들의 죽음>(20.2%),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주거현실>(18.5%) 등도 생명과 노동의 존엄이 부재한 인권 현실로 많은 활동가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드러난 허술한 공공의료>(16%), <기업과 시장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전략>(15.1%),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14.3%), <불안정한 노동조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10.9%),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10.9%),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9.2%), <‘집답지 못한 집’이 죽음이 되지 않도록>(7.6%),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자 해고>(7.6%) 등에도 적지 않은 수의 인권활동가 응답이 있었다. 응답 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비용최소화, 이윤추구로 인한 연이은 화재 참사>(3.4%), <일터괴롭힘과 근로기준법 개정>(1.7%), <사형제 폐지의 시간은 멈춰 있고>(0.8%) 등도 우리 사회의 인권실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으로 꼽힌다.

(그래프는 다음 쪽에)

〈그래프3.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합헌 결정
2. ILO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
4. 기업과 시장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5.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6. 멈춰진 시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7. 목숨을 앗아간 것은 코로나19가 아닌 폐쇄된 시설
8.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와 대형 노동재해
9. 불안정한 노동조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다
10. 비용 최소화, 이윤추구로 인한 연이은 화재참사
11. 사형제 폐지의 시간은 멈춰있고
12.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주거현실
13. 일터괴롭힘과 근로기준법 개정
14.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노동안전 관련법 개정
15.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
16. '집답지 못한 집'이 죽음이 되지 않도록
17. 코로나19로 드러난 허술한 공공의료
18. 코로나19위기와 노동자 해고
19.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불안정노동의 확산
20. 현장실습생들의 죽음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와 대형 노동재해〉 (27.7%)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소의 잦은 노동재해, 발전소의 고 김용균,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 김태규 등 노동자 사망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양천구 빗물펌프장 사고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도 끊이지 않았다. 외주화로 인해 일터의 위험이 가중되고, 안전을 도외시한 자본에 의해 대형 노동재해가 수차례 발생했고, 진상조사위원회 등이 꾸려져 진상규명과 예방을 위한 권고가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들인 조사보고서들은 휴지조각이 되고 일터의 재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가장 많은 인권활동가가 수많은 노동자의 사망을 기억하며 이에 응답했다.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건은 근본적으로 노동자 권리 없이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정부의 무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문제도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 저비용으로 고효율, 고이율을 얻어내려는 정의를롭지 않은 계산법이 우세한 문제”라며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는 현실, 그를 규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일터에서의 노동자의 권리가 필요함을 말했다. “노동안전에 관심이 모여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일터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 등은 결국 현장의 노동자에게 권력과 권한이 없기 때문”으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하고 정책으로 규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온 것과 궤를 함께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인권활동가는 2021년 11월 현재 작년 사망자수를 넘어섰고, 하루 7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가지 못한다고 응답하며,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가 공포의 말이 되고 있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노동안전 관련법 개정〉 (25.2%)

2018년 12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가 협소하고, 처벌 하한 규정도 없어 법 개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했다. 2021년 1월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의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50인 미만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공무원에 대한 처벌 삭제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시행 전임에도 기업 부담, 경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을 이유로 법개약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안전 관련법 개정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짚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 빠지고 규제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중대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누더기 법을 통과시켜 법 해석상의 논란만 양산했고, 기타 노동 이슈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약자인 노동자들의 상해/사망을 야기”했다는 응답과 같이 법제정 과정에서 기업의 눈치를 본 정부, 그 결과로 누더기가 된 제도에 대한 비판이다. 그럼에도 “기업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법제화했다는 점”, “오랫동안 외면하고 미뤄왔던 법안이 노동자, 유가족 등 사회적 압력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점” 등에서 의미를 찾으며, 강한 여론과 행동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합헌 결정〉 (24.4%)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계적 확대 적용을 권고했고,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관련법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주문했으나 현 정부하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영세성과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던 1999년 결정을 20년이 지나서도 똑같이 반복했다. 이에 최근 노동계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장면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0%를 넘어가는 현실에서 법 적용 제외는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 “사업장 규모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여전히 용인되고 있는 사회”, “근로기준법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야말로 노동 존중이 허구란 것을 드러내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은 국회와 정부 둘 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임기 내내 이를 방기했다” 등을 선택의 이유로 답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 (24.4%)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하고,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많은 노동자들을 전환에서 배제했고, 자회사 전환도 정규직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설립방식을 택해 한국잡월드,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는, 정규직이 될 자격을 묻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으며,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하는 세력이 형성되기도 했다.

인권활동가들은 비정규직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정부의 정책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무엇보다 정규직 전환이 권리 확장이 아닌 시혜적 정책이 되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인국공 사태와 같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 공공성의 조건으로서 확인되고 추진되었어야 하지만, 그저 조금 더 나은 일자리의 문제로 만들어 버려,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정하지 않은 문제로 왜곡”,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공약이자 추진과제였음에도 제대로 책임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확대가 실내용. 그리고 능력주의 논리 노골화의 계기가 되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공정성, 역차별 논란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격하게 일었을 때,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의미를 스스로 격하하고 훼손한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능력주의 논리의 확대에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멈춰진 시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21%)

문재인 정부 출범 즈음하여 세월호 인양 결정(2017.3.22~2017.4.11), 선체조사위 설치 특별법 통과 (2017.3.28) 사회적참사 특별법 통과 (2017.11.24) 등 유의미한 입법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선체조사위(2017~2018), 검찰 특별수사단 (2019.11~2021.1), 사회적참사 특조

위(2018.12~현재) 등의 기관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조사/수사를 이어왔다. 사참위는 당초 2020년 12월 조사를 종료한 뒤 보고서 작성에 돌입해야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조사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2020.12.9)을 통해서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했다. 선조위의 조사는 침몰 과정을 일부 밝혀내는 등 성과를 냈으나, 침몰 원인에 대해서 조사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끝에 '내인설'과 '열린 안' 등 두 종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을 지닌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았다. 416연대는 검찰 특별수사단을 비판하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2021년 7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시도했고, 이후 기억공간은 자진해제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2021년 11월 통과시켜 현재 서울시의회 옆으로 기억공간을 이전하였다.

멈춰진 시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주요 인권의 장면으로 선택한 인권활동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했던 사안이었으나 현재 임기가 만료되어가고 있는 시점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태도는 이 정부가 생명 안전에 대해 집요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정권이 적어도 세월호 문제만큼은 해결할 의지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역시나..” 라고 답하며 진상규명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목숨을 앗아간 것은 코로나19가 아닌 폐쇄된 시설> (20.2%)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신병동,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코호트 격리를 실시했고, 시설째 격리되면서 감염이 내부에서 확산되었다. 2020년 2월 코호트 격리를 실시했던 청도대남병원의 경우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 103명 가운데 101명이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폐쇄된 시설, 코호트 격리가 감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청도 대남병원 집단감염 이후 코호트 격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개선은 없이 현재도 요양병원과 정신병동 등에서 코호트 격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의 차별을 더 드러내 주었다고 보았고, 그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코호트 격리를 꼽았다. “코로나 이전부터 강제적으로 시설에 갇혀 사회로부터 '거리두기'당해왔던 이들의 목숨이 결국 희생되었다는 점은,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서 감염병과 관계없이 정부가 이전부터 대응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다”, “경제 논리에 밀려 사람 목숨이 혹은 노동력이 선별되고 위계 지어지는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력을 가진 집단으로 여겨지지 않는 장애인, 특히 시설에 사는 장애인은 보호를 명목으로 했지만 결국 시설 밖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안에 여전히 갇혀 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인권 불감증이 코로나 시기 시설 약자를 우선 희생시키는 코호트 만능주의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 (20.2%)

플랫폼 중개산업이 확산되면서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플랫폼 중개업을 규율하는 것으로 대처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해당 내용의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인정되고,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서 조금씩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자성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플랫폼 산업의 확대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장면을 선택한 인권활동가들은 다양하게 확산되는 불안정 노동의 보호를 위해 전통적인 노동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 노동권 보장을 확대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는 응답은 새로운 노동권 보장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말이다.

〈현장실습생들의 죽음〉 (20.2%)

2017년 1월 콜센터의 이른바 욕받이 부서에서의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홍수연, 2017년 11월 제주 생수공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이민호, 2021년 10월 여수 요트업체에서 작업중 사망한 고 홍정은. 학교도, 기업도, 정부도 보호하지 않는 현장실습제도가 앗아간 이름들이다. 고 이민호 사망 이후 정부는 현장실습제를 폐지에 가깝게 전면 개편한다고 했으나, 이후에도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다.

한 인권활동가의 응답처럼 고졸, 생산직, 비정규직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이들의 죽음은 이 사회가 노동과 생명의 존엄에 무게를 달리 지우는 현실을 오롯이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선택한 인권활동가들은 “학생들에게 현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현장실습이 시작되었으나 오히려 학생들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교내에서 현장체험할 수 있는 시설 확충 등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 “현장실습제를 폐지하지 않아 계속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특성화고의 실질은 전공과 무관한 곳에 아무렇게나 취직시켜 취업률만을 높이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교육이라 쓰지만, 착취라 불러야 마땅한 현장실습제도. 노동착취 그만 포장하고, 폐지해야 한다” 등과 같이 현행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취지에 부합하는 권리 보장 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만 취업률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을 가로막는다. 이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권리침해가 있었음을 또한 우려하며 “현장실습생은 죽어도 알려지지 않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폭력과 학대 속에 묻혀 있는지 다 알지 못한다. 현장실습생 노조부터 제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주거현실〉 (18.5%)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직 횟수가 3회로 제한되고, 고용주로부터 여권을 압수당하

거나 임금체불, 성범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를 증명해서 이직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적정주거형태에 놓여있어도 쉽게 작업장을 이동할 수 없고, 숙소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고용허가제는 생명과 안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2020년 3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조항이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강제근로를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헌법 제23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 주거의 현실이 한국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유로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사건들”, “노동복합도시인 제 거주지 주변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머무는 비닐하우스 수준의 주거 형태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보는 이조차도 인간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더 깊숙이 드러난 사회의 문제(누군가의 노동으로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의 비용을 더 들여야 한다는 합의의 첫걸음도 시작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허술한 공공의료〉 (16%)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부족한 공공병원,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 한국은 국내 병원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8%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이다. 병상은 많지만 공공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지고, 강제 퇴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0년 3월에는 경산의 고 정유엽님이 의료공백으로 인해 사망. 공공병원, 병상, 의료인력 확충 등 다방면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인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성은 힘을 잃어가고 있음. 코로나19상황에서 공공의료는 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특히 인력의 문제를 제대로 대책 마련 없이 희생, 책임감 혹은 예산 확보가 아닌 감사함을 전하는 방식의 비인권적인 행태가 가능함은 우리나라 인권 현실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본다”, “간호사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법 개정은 미뤄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 자본의 이해를 우선에 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라는 수치에 목을 매는 기조가 달라져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코로나19로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의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활동가들은 ‘덕분에’ 캠페인 대신 돌봄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기업과 시장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전략〉 (15.1%)

정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과 시장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공식화했다. 임기 내내 민관 협력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전략에 있어서도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 사회적 합의’를 표방하며 탄중위를 컨트롤타워로 내세웠다. 그러나 산

업계와 친정부 성향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노동자·농민·청년·장애인 등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되었다. 단지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 시민사회의 참여는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탄소중립 로드맵으로 이어졌다. 2021년 10월 18일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대표적이다. 그린-디지털 뉴딜 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제정, 탄소중립위원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지속 발전이라는 토대 위에서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기후 정책만을 쏟아 냈다. 그 결과 기후위기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 주체들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기후위기 주범인 자본의 입김에 따라 탈탄소 전환 경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도 정부가 '탄소중립'을 외치면서도 실은 경제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늉만 내고 있을 뿐이며 "미래가 안 보이는 기후위기 정책"을 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탄소중립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본 중심의 시장 재편에 쫓려 있고, 그마저도 속도조절을 하고 있음에 절망하게 된다"거나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자본의 성장만을 담보할 뿐 이른바 기후위기 최전선을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기후위기 주범에게 기후위기 대책을 맡기는 모순. 기후위기 전략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인시켜주면서 동시에 사회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라는 한 응답자의 답변을 곱씹어보게 된다. 또 다른 응답자는 "기후위기는 체제위기라는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는 답변을 남겼다. 이윤 중심의 체제와 불화할 수 있는 기후정의운동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적지 않은 인권활동가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14.3%)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를 공약. 이후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2020년 발표될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8월 10일 발표된 <2차 종합계획>에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만 담겼으며, 내용에서는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연 1억 원 이하)과 재산기준(9억 원 이하)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내용이고, 심지어 완화 계획에서 의료급여는 제외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전면폐지'라고 말하지만, 단계적 완화에 불과하다.

인권활동가들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지금 당장 시설이라는 구조 안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요식적인 정책이라 지적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결정은 빈곤자의 권리회복과 존엄이 여전히 경제적 논리에 따라 훼손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준 것",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시작했지만 기성 기획재정부 관료를 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 가난한 사람들을 다루는 그들의 방식에서 모든 사람의 기초적인 생존의 권리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기보다 뒤로 밀려나는 문제들을 보여주었다"고 답했다.

<불안정한 노동조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10.9%)

2020년 3월과 5월 각각 콜센터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연이어 발생했다. 거리두기가 어려운 노동조건, 유명무실한 방역지침,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조건은 감염을 확산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쿠팡의 경우 내부에서 감염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노동자들의 업무를 중단시키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강도 노동이 지속되지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였다. 콜센터의 경우 업무 특성상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지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과 현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 정부가 유능해지길 간절히 바란다”, “산재로 인한 죽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 (10.9%)

장애인 권리 쟁취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이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21년 3월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집단수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개인별 지원 및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탈시설 추진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로, 정부는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2021년 8월 2일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이 부족한 “말뿐인 권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장면을 선택한 인권활동가들은 현 정부가 “탈시설, 부양의무제 폐지 등 빈곤-장애인정책의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하는 시설을 유지하는 점”, “문재인 정부 5년 답 없는 정책적 현실, 거대 여당-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지난날의 여당과 굉장히 닮아있고 오히려 불수용보다 무응답으로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는 응답으로 전혀 진전되지 않는 인권 현실을 말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시선이 아닌 권리보장적 측면의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투쟁이라는 의미 역시 이 장면 선택의 이유로 제시되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9.2%)

2021년 2월 26일 ILO기본협약 가운데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및 98호가 비준되었다. 한국 정부는 그간 국내법과의 상충을 이유로 기본협약 비준을 미루어왔었고, 결국 2020년 12월 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한 이후에야 국회에서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의 실내용은 노동3권을 크게 위축시키는 개악이었으며, 비정

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인 노동자성 인정 및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노조활동 권리 보장이라는 요구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개약 노조법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는 제기는 개약 이전부터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노동법은 개약하는 현실”, “국제기준에 맞춰 상향하라는 자의적으로 해석, 오히려 노동권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 항목에 대한 선택 이유를 밝혔다.

〈‘집답지 못한 집’이 죽음이 되지 않도록〉 (7.6%)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2019년 전주여인숙 화재 참사 등 비적정적 주거시설에서 화재참사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었다. 전국에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고시텔 등 다양한 이름의 비적정주거가 집없는 이들의 거처로 쓰이고 있다. 열악한 난방 때문에 사용하는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열악한 취사환경으로 인한 가스폭발 등으로 인해 화재가 잦아도 스프링클러 설치, 창문 설치, 비상대피구 마련 등의 주거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열악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집 없는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상황에서 ‘비적정거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이 안전한 삶과 생존의 공간이 아닌 투기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주거라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인권활동가들은 주거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 집은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받는 현 정부이지만, 그 ‘서민’에도 들지 못하는 이들의 삶은 이번 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부동산 개발과 투기 대응 정책에 열을 올리는 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의 삶을 위해 펼친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에 관한 권리가 누군가에겐 생명의 권리와 직결되어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집답지 못한 집에서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가 가건물에서 자다가 한파에 사망한 사건 등, 주거가 차별의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 “편리와 편의, 비용절감이 만든 부실한 건물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현실이 문제다”라는 이유를 들어 주거권의 중요함을 짚어주었다. 주거로 인해 재난에 대응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근본 해결책과 공적 논의가 부재하다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자 해고〉 (7.6%)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체로 기내 청소, 수하물분류 및 운반 등을 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업체이다. 2020년 5월 11일 코로나19로 일이 줄어들자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했고, 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비정규직에 더 집중되어 나타났다. 2021년 10월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률이 정규직보다 4.7배 높게 나타났고, 통계청 조사에서도 비정규직이 더 많이 잘리고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

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문제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있다”고 평하며 이 장면의 선택 이유를 밝혔다.

〈비용최소화, 이윤추구로 인한 연이은 화재참사〉 (3.4%)

2017년 제천화재 참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2020년 4월 29일 이천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2021년 6월 17일 쿠팡덕평물류센터 화재참사 등 연이어 화재참사가 일어났다. 화재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들은 다르나, 값싼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화재가 일어났을 시 쉽게 확산되고, 그로 인한 유독가스의 문제가 더 큰 참사를 만든 원인이었다. 물류센터의 경우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하며, 스프링클러 작동이 어려워 불이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는 유통업계의 구조가 참사의 주원인이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윤추구적인 건축물 짓기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일터괴롭힘과 근로기준법 개정〉 (1.7%)

한림대 성심병원 장기자랑 사건, 서울의료원 고 서지운 간호사 사망 등으로 일터 괴롭힘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직장갑질119 출범은 괴롭힘 문제를 사회화하고 대응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국회도 2018년 12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규제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이후 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제도가 강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고용관계가 은폐된 경우 등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상태이다.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인권활동가들 역시 제도개선의 진전이 일부 있었으나 충분치 못한 점을 그 이유로 밝혔다.

〈사형제 폐지의 시간은 멈춰 있고〉 (0.8%)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1996,2010 합헌판결) 2020년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선언에 한국 정부가 최초로 찬성 표결을 했다. 2021년 2월에는 국가인권위가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상민의원(의)이 발의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대선 후보 토론회부터 사형 폐지를 언급해왔으나 그 이상의 의지나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2) 소결

지난 5년 동안에도 홀로 위험한 노동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줄을 이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권활동가들이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와 대형노동재해〉를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이 많은 죽음들이 막을 수 있는 것이었기에 더욱 기억하고 있는 까닭일 것이다. 현장실습생 및 노동자 사망뿐만 아니라 대형 시민재해 역시 마찬가지다. 기억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정부는 매번 약속하지만 단 한번도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잊혀져 가고, 여전히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배제와 차별, 소외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아픈 면을 드러내는 말들이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고, 안전에서조차 배제되는 현실은 여전히, 다양하게 늘어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법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시설에 간혀 관계를 차단당하고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오히려 그 단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강요했다.

그런 사회가 낳은 수많은 죽음, 배제된 삶, 끊어진 삶의 고리. 이 모든 장면을 연결해 나가는 운동의 걸음을 바쁘게 걸었지만 한계가 많았다.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노동권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기에 이를 사회화하고 제도적인 개선의 틀도 마련했지만 여전히 작은 사업장, 비정규직 등에게는 한계적이다. 일터의 안전을 위한 법개정도 이루어졌으나 빈 지점이 많고, 열악한 노동자를 제도의 보호 밖에 두는 태도는 여전히 있다.

생명과 노동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가 배제·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차별과 불평 등의 수많은 벽은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 비정규직,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많은 차별의 갈래는 여전히 존재에 따라 존엄의 무게를 달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와 빈곤의 굴레는 보통의 삶을 누리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기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달라지지 않는 인권 현실은 생명과 존엄, 노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3. 함께 기억해야 할 인권의 장면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일 중 하나는 모든 사건/장면을 선택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이었다. 특정한 사건/장면으로 지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택지에 포함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교차하는 사건/장면을 하나의 선택지로 좁히면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 53개의 제한된 선택지만으로 인권활동가들이 인권 현실을 진단하기에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권활동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며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인권의 사건/장면을 추가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단에서 18개의 인권의 사건/장면을 추가로 작성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한계>

2017년 1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 설치의 근거 법령, 위원 선정과정 모두 매끄럽지 못했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활동기한 마지막날에서야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결과와 권고를 발표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검찰의 편파·부실 수사를 공식화했지만, 잘못은 있으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다. 경찰의 진압과 검찰의 수사과정이 아니라 강제부검 등 최소한의 절차적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 외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다시 밝혀내지 못하고 공수처 설치 논리의 근거 삼는 구실로서 작동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과 4차산업혁명>

2021년 1월 AI챗봇 이루다의 성차별, 혐오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의 과정이 불법적이고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인공지능 제품을 생산하고, 어떻게 우리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할 수 있는지 목격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인공지능으로 사람에 대한 처분이나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하면서 그 보호 방법이나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계의 요구로 점철되어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인공지능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무기수출>

태국과 미얀마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서 한국산 물대포와 최루탄이 사용되고 있다. 'K-방산, K-Cop'의 이름으로 억압과 폭력을 수출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무기수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5~2020년 동안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한 결과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박근혜 정권부터 시작한 무기수출의 가파른 증가세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나눔의 집 인권침해 사건의 폭로와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시설로 2020년 내부제보자들의 고발로 후원금 부적정 사용 문제와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이후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가 있었고, 경기도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나눔의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법령, 정관위반과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이사진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임시이사진 구성을 통해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였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운영진 역시 교체되지 않은 채 공익제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할머니들의 상황 역시 바뀐 것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노량진수산물시장 강제철거〉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명목으로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추진했다. 열 차례의 명도집행 끝에 2019년 9월 말 출입통제 펜스를 설치하면서 구시장이 완전히 폐쇄되었다. 상인 80여 명이 현대화사업을 비판하고 구시장 부분존치 및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수협의 탄압은 지속되었고, 용역 폭력과 스트레스 등으로 2021년 11월 4일 구 시장 상인 고 나세균씨가 사망에 이르렀다.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명령〉

2021년 2월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통보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한 차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히려 차별을 차별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돈이 된다 싶을 때는 할랄푸드니, 이슬람 관광객이니 돈을 대고 사업을 벌이다가, 갈등이 펼쳐지면 손쉽게 기독교나 지역주민 핑계 대며 갈등을 방관해왔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북구청의 공사중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결과 공사 중지 처분은 철회되었다. 앞으로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온 사회와 단절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의 잇따른 죽음〉

2021년 초, 성소수자 인권 현실을 드러내고 바꾸기 위해 함께 싸워온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죽음 소식도 잇따랐다. 이미 자살률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자살률은 더욱 높다고 알려져 있다. 차별과 혐오에 의한 사회적 타살인 성소수자의 죽음에 추모와 애도가 이어졌다.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관들이 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보호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성주와 강정, 군사기지에 맞선 싸움은 계속된다〉

2017년 9월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하면서 성주는 지금도 매일 공사 저지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

고 있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의 아픔을 아랑곳않고 2018년 9월 관함식이 강행되기도 하였다. 군사기지로 바뀐 마을을 삶의 터전, 생명의 땅으로 되돌리는 그날을 위해 성주와 강정은 오늘도 싸우고 있다.

<유보되는 한일 관계>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리된 일이라며, 보복으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하며 무역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기 일본군'위안부'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발언하며 한일 관계를 재구축할 필요성을 확인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경색된 이후로 문재인 정권은 방향을 선회하여 외교부는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로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유보하고 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정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막으며 개발자금을 받은 한국정부가 공모해 만든 문제를 더는 유보해선 안 된다.

<이주 아동 출생등록제도>

2021년 4월 미등록 이주민 여성이 아이가 실종되어 경찰서를 찾았다가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사건이 최초로 아닐뿐더러 유사한 사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출생, 15년 이상 체류하며 학교를 다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으며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이주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의 유무에만 제도가 혜택을 부여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또한 이주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주아동의 권리만을 살피는 것을 넘어 이주민의 권리, 아동의 권리를 같이 살피고 보장하기 위한 관점과 태도가 정책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2019년 11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제 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와 제 25조(벌칙)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조항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실제 HIV 전파 여부와 무관하게 HIV 감염인의 모든 성적 행위를 규율하고 처벌하는 식으로 작동해왔다. 정의 조차 불분명한 '전파매개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해당 조항은 HIV 감염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감염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해온 끝에 HIV 예방과 치료 모두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왔다.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혐오의 확산을 멈추기 위해, HIV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파매개행위죄 폐지가 필요하다.

<청소년 주거권과 시설 문제>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현실이다. 원가정에서 살 수 없거나 살고 싶지 않은 청소년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미성년자(민법상 만18세까지)의 경우, 원가정이나 시설보호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거주시설, 소년수용시설은 1년 반 넘게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격리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시설 역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지침에 의해 전면 휴관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가 절실히 필요한 청소년들이 계속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청소년 거주시설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나아가 친권자의 거소 지정권을 폐지하고, 독자적 개인으로서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추모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을 사회적으로 애도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거나, 오히려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책임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방역 당국과 정부는 몇몇 코로나19 감염인들에게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개인의 수칙 준수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식으로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이 개인화될 때, 코로나19 감염인이 느낄 불안함에 대한 공감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애도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은 사회적인 재난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이 재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애도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한 이유이다.

〈태아산재 인정과 산재보호법 개정〉

2020년 4월 태아산재가 대법원에서 인정되었다. 태아산재는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4명이 시작한 싸움으로 태아의 건강손상이나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도 엄마 노동자의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최초 판례였다. 또한 직업적 요인에 의한 여성노동자들의 산재 경험은 훨씬 더 많은 수일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노동자 건강권이 정상/남성/이성에 등 기준으로만 접근될 때 놓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사건이었다. 2021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태지만 아버지로 인한 영향, 휴업/유족급여는 빠진 채 입법을 앞둔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현실 외면한 한국-이스라엘 FTA〉

2021년 5월 한국이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하며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첫 사례로 보도되었다. 같은 시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 주민 219명이 사망하고, 1,600명이 부상당하는 등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한국-이스라엘 FTA 비준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시험실 삼아 개발한 신기술과 무기 수입을 확대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FTA를 파기하고 이스라엘에 포괄적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해야 한다.

〈한반도 종전선언,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으며 2020년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국제

캠페인을 시민사회가 시작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 기대한 한반도 평화는 이후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사그라들고 다시 긴장상태가 강화되었다. 2021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도 잠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으로 다시 한반도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다시금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이라는, 4.27 판문점 선언에 새긴 약속을 선언문에 갇힌 말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말뿐이 아닌 군비 감소와 군사 훈련 중단부터 나서야 한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 규제〉

2019년 3월에 인도네시아 의류기업 SKB에서 한국인 사장이 임금을 체불해 현지에서 문제제기가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남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 막상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권경영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 기업주의 노무관리 고충을 들어주는 전담반을 운영하겠다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이후 미얀마 군부에 한국기업 포스코가 돈을 대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고, 현대건설은 해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등 인권침해에 앞장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LH와 대장동, 주거공공성은 어디로〉

2021년 3월,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의 땅 투기가 드러나며 공분이 일었다. 10월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공익환수 모범사례로 내세웠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업자들에 엄청난 이익을 보장해준 사실이 드러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의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하며 주택개발사업의 비리만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개발사업이든 돈 잔치를 벌이며 주거권을 부동산 시장에 내맡기는 현실부터 주목해야 한다. 공공을 위한다는 늘 주거공공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개발사업과 단절할 필요가 있다.

*

추가 항목을 작성하기에 앞서, 평화를 키워드로 하는 사건/장면은 대부분 빠져있었다. 2017년 인권운동더하기에서 제출한 인권과제 중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와 관련한 항목들 다른 분류와 달리 설문지 선택지로 작성하기 위해 ‘사건화’시키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설문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항목으로 남겨둔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건/장면을 제안한 인권활동가들이 이 빈 자리를 채워주었다. 덕분에 다루어지지 못한 사건/장면들에 평화를 키워드로 하는 사건/장면을 함께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 인권 현실을 평가하는 작업은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인권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현실을 진단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119명의 인권활동가는 공동의 과제를 찾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하는 인권의 사건/장면을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을 만들고 있었다. 설문 하나가 모든 인권 현실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인권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사건/장면이 무엇인지부터 한 번 더 주목해야 하는 사건/장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마주할 인권운동의 과제를 찾아 나서는 데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는 인권운동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단면만을 보여주고 인권활동가들에게 인권 현실을 진단하고 평가까지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설문지를 작성한 기획단조차도 응답하기 쉽지 않았던 설문조사를 두고 어렵다는 피드백이 주를 이룬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119명의 활동가가 기꺼이 참여에 동참해 주었기에 가능했던 특징이 하나 있다. 53개의 선택지 중 단 하나의 선택지도 빠짐없이 인권활동가들은 인권 현실을 드러내는 사건/장면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그저 많은 활동가가 응답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주장해온 인권과제부터 새롭게 등장한 이슈까지 놓치지 않고 주목하며 인권 현실의 총체를 바꿔내기 위한 활동가들의 ‘운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활동가가 응답한 설문의 특징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는 더 있다. 먼저,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분류에서 드러난 설문 응답의 특징은 오랜 시간 인권운동의 과제라고 일컫는 영역에 여전히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촛불집회를 거치며 등장한 정부에서조차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모습을 많은 인권활동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선택하며 국가권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 주목했다. 또한, 70년을 넘긴 국가보안법에 대해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못한 채로 남북관계의 다른 국면을 만들 것처럼 이야기하던 문재인 정부의 한계에 주목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며 다른 양태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국가의 감시 문제에도 함께 주목했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에서는 성소수자, 여성, 난민, 청소년 등이 겪는 다양한 현실을 인권의 장면으로 선택한 응답의 분포는 권리 보장에 대한 고민 없이 소수자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싸움이 인권의 장면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소수자 문제가 각기 다른 소수자 영역의 싸움이 아니라 연결된 싸움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가 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권활동가들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한계를 주목하며 관련한 항목에 다양한 응답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업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현장실습생 안전대책이 도출되지만, 이전과 같이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결과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들게 하기 충분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그대로 둔 채 생명과 안전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결국 누구의 생명도 지킬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싸움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모습에서도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은 꾸준히 드러났다. 인권활동가들은 이런 정부의 모습을 인권 현실을 포착하는 장면으로서 놓치지 않고 주목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내고 다시 대선을 앞둔 지금, 보수 양당 구도 속에서 생명과 안전, 평등의

가치는 사라지고, 차별을 선동하고, 반페미니즘, 반노동, 반인권을 서슴없이 떠드는 대선 후보들을 보고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기대되지 않는다고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인권과제를 도출하고 제안하는 것만으로 인권 현실을 바꿔낼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체적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싸움이다. 119명의 인권활동가가 진단한 인권 현실을 손에 쥐고 인권운동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길을 찾아 나설 때다. 차별금지법 만들려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오라는 정치권에 “우리가 사회다”라고 외쳐왔듯, 지금 인권운동이 찾아 나설 길은 제도를 넘어 세상을 바꿔내는 운동을 조직하는 일이다. 우리의 삶과 존재를 위협하게 하는 체제를 겨냥하고, 지금과 같은 제도정치에 우리의 인권을 내맡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데 이번 설문조사가 조그만 디딤돌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발행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계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펴낸날 : 2021년 12월 9일

문의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hrcomm2017@gmail.com